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15대 국회 말부터 13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선정한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국정감사 평가회

◆ 일시 : 2011. 11. 21.(월)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2층)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5대 말부터 금년 정기국회까지 13년 동안 서울은 물론, 제주 부산 광주 대전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4인)은 270여개 NGO가 연대하여 제18대 국회 제4차년도 국정감사를 15개 상임위원회 국감현장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2011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00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2층)에서 개최합니다.
3. 이번 국감종합평가회 및 시상식의 큰 의미는 행정부·사법부·헌재·선관위 등 국가 5부를 총 점검하는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발표하여 우수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격려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국회의 4대 기능회복·활성화를 통한 국가(5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적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고취하고, 19대 총선 등에 유익한 '유권자 정보'로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도 국감총평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우수상임위원장 선정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전화. 523-8760~7)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선정)

■ 국정감사 모범의원 (국회직, 당직, 위원회 순)

홍재형 국회부의장(국토해양위원회 위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법사위원회 위원)
박상천 국방위원회 위원(민주당, 5선)	김충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민주당, 5선)

■ 우수 상임위원회(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원회 (의원수)	우수의원 /정원	비율 (%)	의원님명 <<존칭 생략, 가나다 순>
국회운영	4/24	16.66	노영민 이명규 이정선 홍영표
법제사법	4/16	25.00	노철래 박지원 이춘석 정갑윤
정 무	6/22	27.27	박병석 박선숙 배영식 이성현 이진복 조영택
기획재정	6/26	23.07	권경석 김성식 오제세 이용섭 이한구 이해훈
외교통상 통 일	5/28	17.85	구상찬 박주선 유기준 윤상현 최재성
국 방	4/17	23.52	김학송 서종표 신학용 유승민
행정안전	6/24	25.00	문학진 서병수 유정복 이명수 장세환 정수성
교육과학 기	5/21	23.80	권영진 김유정 박보환 이상민 주광덕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	8/28	28.57	김성동 허원제 김을동 김재운 이철우 장병완 전병헌 전해숙
농림수산 식품	7/19	36.84	김영록 김우남 김학용 김호석 성윤환 정해걸 황영철
지식경제	6/25	24.00	김재경 김재균 박민식 정태근 조경태 최연희
보건복지	6/24	25.00	손숙미 양승조 윤석용 이낙연 전현희 주승용
환경노동	5/14	35.71	손범규 이미경 정진섭 조해진 홍희덕
국토해양	7/31	22.58	김희철 박기춘 백재현 장윤석 장제원 정희수 홍일표
여성가족	2/16	12.50	김옥이 김혜성
계	81/335	24.18	<운영·여성 등 겸임상임위의 우수위원은 해당 상임위 활동까지 반영한 것임>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통계

① 정당별 <<감사위원수, 전체의원의 ()안은 겸임상임위원 운영, 여성가족 포함위원수>>

구분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무소속
전체의원(명)	295(335)	169(192)	87(99)	16(18)	8(10)	6(7)	2(2)	1(1)	1(1)	5(5)
우수의원(명)	81	40	33	2	3	1	0	0	0	2
선정비율(%)	27.46%(24.18%)	23.67%(20.83%)	37.93%(33.33%)	12.5%(11.11%)	37.5%(30%)	16.67%(14.29%)	0%(0%)	0%(0%)	0%(0%)	40%(40%)

※ 국회의장은 국정감사위원이 아니므로 6선 의원인 박희태 국회의장 제외(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10월 6일 사퇴를 하였으므로 통계숫자에 넣음, 우수의원인 정수성 의원은 11월 10일 한나라당 입당, 무소속의 이인제 의원은 10월 10일 자유선진당에 입당, 국민중심연합(심대평)은 자유선진당과 통합함,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0월 6일 탈당하여 현재는 무소속임 * 당적통계는 국감당시기준)

② 당선횟수별 <<감사위원수, 전체의원의 ()안은 겸임상임위원 운영, 여성가족 포함위원수>>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전체의원(명)	142(171)	81(91)	42(42)	20(21)	10(10)	295(335)
우수의원(명)	46	26	7	2	0	81
선정비율(%)	32.39%(26.9%)	32.1%(28.57%)	16.67%(16.67%)	10%(9.52%)	0%(0%)	27.46%(24.18%)

※ 5선이상 의원은 7선 1명, 6선 4명 5선 6명 등 총 11명이나 감사위원이 아닌 6선 의원인 박희태 국회의장 제외,

③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	우수의원	선정비율(%)
전체의원(명)	45(60)	11명	우수의원 81명중
비율(%)	우수의원 295명중	여성의원 45(60)명 중	13.58%
	15.25%	24.44%(18.33%)	

※ 지난 해에 비해 여성의원의 우수의원 수가 줄어든 이유는 10·26 재보궐선거에 여성의원인 나경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경선 또는 선거출마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④ 지역구/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계
전체의원(명)	54(69)	241(266)	295(335)
우수의원(명)	13	68	81
선정비율(%)	24.07%(18.84%)	28.22%(25.56%)	27.46%(24.18%)

※ 지역구 의원 245명(현원 242)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박희태 의원은 제외 (295명)

⑤ 선거구별 <<감사위원수, 전체의원의 ()안은 겸임상임위원 운영, 여성가족 포함위원수>>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5(47)	10	22.22%(21.28%)	강원도	8(11)	2	25%(18.18%)
부산광역시	18(20)	7	38.89%(35%)	충청북도	8(10)	2	25%(20%)
대구광역시	12(13)	4	33.33%(30.77%)	충청남도	10(12)	2	20%(16.67%)
인천광역시	12(15)	4	33.33%(26.67%)	전라북도	11(11)	2	18.18%(18.18%)
광주광역시	8(8)	5	62.5%(62.5%)	전라남도	12(13)	5	41.67%(38.46%)
대전광역시	6(6)	2	33.33%(33.33%)	경상북도	15(16)	6	40%(37.5%)
울산광역시	6(6)	1	16.67%(16.67%)	경상남도	16(19)	4	25%(21.05%)
경기도	51(54)	10	19.61%(18.52%)	제주도	3(5)	2	66.67%(40%)

2011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우수 상임위·우수의원 선정

- 270여개 NGO의 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국감평가회 겸 시상식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4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3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5명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하고,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5명 감사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 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13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제18대 국회 제4차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상임위·국회의원 시상식”을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00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2층)에서 개최함.

2011년도 국정감사 총평

평점 C의 2011년도(18-4) 국정감사

10·26 재·보궐 선거 앞두고 실시된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준비부족과 관심분산으로 국민적 기대 못미쳐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 . .

— 국가·사회를 밝고 맑게 하고, 정부를 건강하게 하는 국정감사, 입법권·예산권마저 미비한 우리 국회의 기능을 보완케 하는 국정감사의 비중은 사뭇 크다

1. 국정감사는 제헌국회(헌법 제61조)부터 시행, 군사정부 당시에 중단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에 따라 제13대 국회 때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세계 유일한 정부통제·민주정치체도로서,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민주화)·경제적(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성공한 나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주요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즉 국정조사와는 다르게 여·야당 합의 없어도 매년 국정을 감사하여,
 - ① 주권재민, 법치, 민주주의국가임을 확인했고
 - ② 모든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예방과 치유
 - ③ 야당과 언론 등이 권력을 감시 견제 가능케
 - ④ 국가사회 구석구석의 병폐와 문제 척결
 - ⑤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의 낭비와 비효율 및 잘못된 법·제도·정책을 시정·추구함으로써,

----- 국회 4대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온, 참으로 (불행중) 다행스러운 제도였으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가를 제외한 우리나라 처럼 의회기능이 취약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한다.

2.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4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13년 전 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연대기구로서, 헌법(전문, 제1조, 제10조, 제21조)상의 기본권인 정보에의 권리·알권리는 물론, 국회법, 국정감사법상의 의사공개원칙에 의거하여,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장에 매 피감기관마다 모니터위원을 2~5명씩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감사와 295명 국감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였는 바(국감 초에 일부 상임위의 모니터링방해가 있었으나 즉시 협조모드로 전환됨), 10·26 재·보궐선거를 의식하였던 국정감사였고, 또한 (예년과 달리) 2011년 8월 임시국회가 계속되었고, 추석 직후에 국정감사를 곧바로 시작되어 민생·서민·정책감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감사였다고 평가한다.

3. 8월 임시국회와 추석직후 국감실시로 인한 준비부족, 재·보궐 선거 내년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여론의 관심분산으로 조명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특히 9월 29일 중간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어 관심권 밖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긍정적인 점을 찾는다면, ① 지난 제17대 국회말과 같은 국정감사보다는 극단적인 정쟁 국감이 사라졌으며, ② 국가현안 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고, ③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도 해킹 등의 사고에 무력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도 심각하다는 문제점 등이 절타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 크게 실망스러웠던 점은 ① 교과위가 제18대 국회 들어 4년 연속 파행 국정감사를 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부실한 감사가 되었고, ② 감사위원의 자리비우기(중복질의 등의 많은 폐해가 있음)가 늘어나, 감사다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시찰위주의 국정감사 편성으로 가뜩이나 추석이후 국감으로 인한 준비부족, 개천철 등으로 인해 국감기간의 단축 등이 있었음에도, 알차고 충실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긍정적인 점	실망스러운 점
1. 극단적인 정쟁 국감이 사라진 점	1. 교과위의 자유민주주의논쟁 파행 (교과위는 18대 국회 4년간 파행)
2. 4대강사업 및 FTA 효과에 대한 여야간의 정립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보	2. 일부 상임위원회의 시찰 중심 국감 (시찰은 국감 기간 외에 연중 상시 가능함)
3. 국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통합 관리의 부실실태(해킹, 정보유출) 지적 (국세청의 홈텍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교과위의 교육행정시스템 등)	3. 감사위원의 과도한 자리비우기 (감사 중에 감사위원 전원이 좌정해야 할 5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타위원의 질의는 듣지않고...)
4. 주요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정당차원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4. 감사위원의 막말 소동 및 증인들의 국감불출석 등 국감경시

(2011년도 국감은 2007년도 국감(제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당시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전 초전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검증을 둘러싸고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정책검증도 아닌, 네거티브 경쟁으로 막말과 욕설(별사위) 더 나아가 물리적인 폭력사태(정무위)가 빚어졌던 것보다는 건전한 국감이었음.

4.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1) 피감기관 앞에서 증인채택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 2) 여·야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인해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점 3) 별첨과 같이 피감기관과 국회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국회의 권위 실추현상이 계속(17대 국회 4년 내내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지연·부실 지적은 단골 메뉴로 등장했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어졌는데 4차년도까지 계속됨)되었다는 점 등 감점요인이 있어 이번 국정감사는 전체적으로 평가점수를 계속 유지한 '평점 C'의 국정감사로 평가한다.

2011년도 국감 직전과 초반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활동과 관련한 사실도 아닌 내용의 괴문서 투서 등의 국감단 훼파·모함(모함)이 있었던 바, 국정감사모니터단과 관련된 사실말씀을 드리면, 국감현장모니터링은 국회발전·총실국감과 각 상임위 행정실의 편익에도 우리 NGO모니터단이 여러모로 순기능을 해왔다고 자부하면서, “본 모니터단이 ① 정량평가만 한다, ② 출석만 체크한다, ③ 국감모니터링을 독점하려 한다, ④ 평가기준이 없다. ⑤ 시상식에 참여 안하면 상을 안준다, ⑥ 권력기구화되었다, ⑦ 소감을 강요한다” 는 등등은 사실이 아닌 취지와 의미가 왜곡된 내용(이어서, 마치 이승우화의 ‘저포도는 신포도’ 라고 한 여우의 독백과 같으며 우리 모니터단은 ① 지난 13년동안 단 한번도 정량평가만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한 바 없으며, ② 국회의원 여러분의 자평과 추천, 기자·보좌진·국회직원은 물론 사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1개월 이상의 정성평가과정을 거쳤으며, ③ 출석체크는 감사위원이 엄정한 국감을 하도록 유도하는 5가지 순기능을 해왔으며, 출석은 기본으로서 결석을 2일 이상 한 의원을 우수의원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개근한 성적 우수의원이 많기 때문이며, ④ 국감모니터활동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모든 단체의 가입을 환영하였고, ⑤ 상임위마다 제한된 모니터석(의석)이므로 하여, 전체적인 통계도 가능케 하고자 단체마다 서로 양보하며 조율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협조요청한 것이 본 모니터단의 특징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⑥ 평가기준은 이미 13년 전부터 공개·제시되어 왔고, ⑦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형편상 상패제작만을 안하는 것이지 수상사실 자체는 계속 유효한 것이며, ⑧ 권력기구화 라는 표현은 악의적인 왜곡이고, 권위있는 평가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음이란 표현이 맞고, ⑨ 13년 동안 국가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한 것도 아닌, 국회발전과 국회 4대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자기비용(自費)을 들여서 봉사하는 활동인데도, 1~2인의 협잡으로 드러난 국회 8개정당 보좌진협 ‘건의서’ 등의 모함으로 국감NGO모니터단의 활동이 크게 방해받았던 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법한 권리침해·명예훼손 등은 적정하게 처리될 것임.

“피감자들의 회피성 답변이 지나치게 많았다.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질의 또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모니터보고서 의견에서

2011년도 국정감사위원 의원평가

1. 국정감사 모범의원

(1) 선정근거 (연혁)

그간(제16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병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기간에도 대부분 국정을 감사하는데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제17대 국회에 들어 그런 관행을 깨고 제1차년도에는 김덕규(우), 박희태(한) 국회부의장(현 국회의장)께서 결석없이 충실히 국감에 임하였으므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한 바 있고, 매년 선정·시상한 바, 주요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다선의원 중 국감 참여가 여타 의원들보다도 모범적이며, 특히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하고자 한 의원들을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함.

(2) 선정사유 (국회직, 당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 홍재형 국회부의장 (국토해양위원, 민주당)

막중한 국회부의장의 직무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국정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 접근성 개선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 필요성을 강조했고, 항만간, 터미널 운영시간 과당경쟁으로 하역료 수준이 일본의 30%, 중국의 7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항만공사가 임대부두에 대해 하역단가의 적정성과 경영실태, 시장문란 행위 등을 점검하지 않아 과도한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국감에서는 ‘플로팅 아일랜드에 약 128억을 출자하는 등 공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질타하면서, 민간조종사 자체양성 시스템 ‘허점’ 문제, 철도·도로 공익서비스 지원의 난맥상, 국토부 산하 5개 공기업의 부실문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운영과 수익사업의 방향 재정립 주문 등 다양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임.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

국정감사에 소홀해지기 쉬운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중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현장에 참여하여 (뛰어 다니면서) 정책질의를 하여 모범적인 국정감사 수행

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10월 26일 재·보궐선거로 인해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활동에 등한해 질 수도 있었음에도, 매일 매일의 한나라당차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발표하는 등 소속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독려했고,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변상금 집행이나 시정요구 등에 대한 부처의 이행현황을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수사를 벌려서라도 토착비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타 지역 및 다른 유형의 사건 전체에 규범을 삼을 것을 촉구하는 등 실효적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임.

○ **박 상 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지난해에 이어 국정감사장에 시종일관 참여하여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전개하였으며, 국방분야에 있어서 참신한 정책제안 등 정책국감을 이끌어 냈으며, 중량감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임. 불량 소독용알콜 납품문제, 국군서울지구병원 구조조정 등 장병의 보건환경 난맥상 지적, 정책질의와 함께, K1계열 전차의 고장원인 분석에 있어서, 독일 ZF社 자체의 내구성, 기능시험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1985년 도입한 까닭에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2001년 지침 개정 당시의 전제조건이었던 북한의 MTCR 가입 무산으로 원인무효가 되었으며, 이미 사거리 3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북한에 대한 자위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 지침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음.

○ **김 충 조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 민주당)

지난해에 이어 초선못지 않은 열정과 패기로 국정감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관록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중앙주요 10개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관리문제를 이슈화하였고, 선관위 홍보대사 선정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주문하고, 재·보궐 선거 예방위한 근본적인 대책 주문, 기업형수퍼마켓(이하: SSM) 대표들에게 “SSM운영 기업들의 편법적인 점포확대는 국회의 대중소기업 상생관련 법안들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처사” 라고 질타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유치인들 인권침해 접수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서 유치시설의 개선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점검 및 정책제안과 함께 13대 국회부터 쌓은 내무행정가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임.

2. 우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1) 선정기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새로운 국감기법 개발을 통한 공개 및 국정감사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등 NGO의 자유로운 모니터 가능 및 협조),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국감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한 점), ③ 적절한 자료집을 만들어 생산적 국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 여부, ④ NGO의 의견 등이 각 의원들의 질의 속에 많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⑤ 우리 모니터단이 지난 13년동안 사용한 우수 상임위원회 평가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번 제18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의 활동이 크게 조명되었는 바, 위원장의 리더십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선정결과 (국회법 37조에 의한 순)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 재 희)

매 국정감사 일정마다 거의 자정무렵까지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방송통신분야 문제, 문화체육관광 문제에 대한 정책점검을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추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까지 충실한 국정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공방, 증인채택문제로 인해 여·야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원만히 해결하면서 종편 출범을 앞두고 방송광고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과 미디어법 입법을 둘러싼 공방과 종편 특혜 논란, MBC 통폐합과 방송사 인사 문제 등과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불법 복제물 대처 방안 제시 등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임.

○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 최 인 기)

위원회 성격상 농·어·산촌경제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보완 대책을 물으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를 점검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수출 촉진을 위해 도입한 수산물 이력제가 위조와 복제에 취약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피감기관의 문제점과 농수산업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여론화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이며, 특히 연엽초 수매와 관련해 두 차례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KT&G 민 모 대표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엄중한 수감질서를 확립하고, 국제곡물시장에

서 민관이 힘을 합쳐 자력으로 곡물을 수입하겠다는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문제, 농협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안에 대한 질타,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을 예로 들며 해킹에 대한 농협의 강력한 대비와 함께 농협사칭 보이스코핑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등 다양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고, 국감기간 내내 최인기 위원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임.

○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영 환)**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인 김영환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수감태도를 바로 잡으면서 국감기간 내내 여·야당간의 정쟁없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평가이며, 유사석유 판매 단속과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이 크게 조명되었고, 한전의 기부금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문제 등 중소기업정책을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책임추궁과 생산과 공급이 제각각인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고, 특허청 재택근무제도 악용 문제, 대기업에 대한 특허청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난맥상을 지적하였으며, 유사복제 캐릭터의 특허 등록 등 특허심사 기준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예고 없는 단전조치 등 평소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정책국감을 수행하고, 국감NGO모니터단의 모니터환경도 배려하여 국감공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성 순)**

충실한 감사·질의를 보장하고자 가장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시행하였으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타협 권고안을 도출하여 관철시킨 점이 크게 평가되었으며, 여야 합의하에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수행하였고, 4대강 사업 등 여야간의 날카로운 정쟁요인이 없지 않았으나, 대화와 타협의 원리에 따라 잘 조율하였으며, 삼성백혈병문제, 골프장 환경훼손,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청년 일자리 확충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은 청년인턴제를 거쳐 정규직이 된 사람들의 1년 후 정규직 여부를 따지는 취업유지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수치와 실제 수치가 차이 나는 점을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임.

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

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고, 국정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국정감사장을 지키며 국정감사를 수행하신 의원님을 우선적·기본적으로 선정함.

(2) 평가방법

- ①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 (추천내역은 속기자료·화상모니터 등으로 확인)
- ②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신문)의 적정성 검토
- ③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 ④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 ⑤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 ⑥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희
- ⑦ 국회의원으로부터 온 자평(自評) 분석·확인
- ⑧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 ⑨ 10대 일간지, 3대 방송, 3대 경제지, 연합뉴스, 지역신문 등 언론보도내용 검토
(자세한 것은 13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 ①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 ②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낭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 ④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 ⑤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 ⑥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 ⑦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 ⑧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 ⑨ 일문일답식(묻고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 ⑩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등 특화된 정책국감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 ⑪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 ⑫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 ⑬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 ⑭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 ⑮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13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평가 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 ① 정성 및 정량평가의 결과가 비슷한 경우에는 성실성이 높은 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 ②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에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 ③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참작함.

(5) 국감우수의원 선정 제외사유

예년과 같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서는 예산·정책점검, 정책제안 등 훌륭한 국감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감우수의원의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 ① 국정감사의 기능과 정치철학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정감사제도에 대해 무용성을 제기하거나 폄훼한 의원
- ② 막말 등 정제되지 않은 언어사용 및 품격없는 행동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진행이나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케 한 의원

▣ 2011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01.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등 다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영화 도가니를 통해 주목받은 광주 인화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그 자체보다 그 범죄가 세상에 공개되고도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재단 측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가져다준 사건이었음.

02. 대규모 정전사태의 책임소재

국정감사 직전인 2011년 9월 15일 예비전력량 부족으로 인해서 예고없이 발생한 사건으로 이로인해 사무실과 상점가, 주택가 등 전국 도심 곳곳에서 일시적으로 전력이 차단돼 시민들은 업무상 차질을 빚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 바,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까지 조명되고, 재발방지대책 등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짐.

03.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 책임

7개 저축은행(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이 일시에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뱅크런’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촉발돼 다수의 예금자 피해가 발생하여,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고라고 할 정도였는데, 정부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되었음.

04. 한미FTA협정 비준 논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FTA로 예상되는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비준안 처리 시기를 놓고는 침예하게 대답했는데, 한나라당은 미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만큼 우리도 10월내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면서 ‘줄속처리’ 보다는 미국측 이행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핵심이슈 사항이었음.

05. 청년실업 및 일자리창출 문제

청년실업 100만 시대로 표현되는 취업난에 젊은이들은 꿈을 펼 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또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채용이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정작 정규직 전환 실적은 극히 저조한 문제 등이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 정부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조명됨.

06. 대학 등록금 문제

정부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면서 마치 2조2500억원을 투입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홍보했지만, 이중 7500억원은 대학이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도 모르는 돈이라면서 생색내기식 장학금 늘리기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감, 정부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논란이 됨.

07.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국정기조로 삼고 있으나 성과는 제대로 보이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크게 대두됨.

08. 공기업 방만 경영 및 낙하산 인사

매년 지적되고 논란이 되지만, 상당수 공기업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백억원의 돈을 복지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와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기관장 103명 가운데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권 출신이 60여명으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정부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 여성가족위원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감 등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됨.

09. 포항 유홍업소 여종업원 8인 자살 사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지역 유홍업소 여종업원 8명이 잇달아 자살했고 지역 경찰이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경찰청의 자체 진상조사에서 업주의 접대를 받고 출동을 지연하거나 성매매 단서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었는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조명됨.

1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한진중공업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조남호 한진중공업회장이 국감에 출석하였으며, 김진숙 민주노동당 부산 양산본부 지도위원은 같은 85호 크레인에 올라 1월 6일부터 2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고, 150여대의 희망버스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부산에 내려가 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한 시위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과 정부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다루어짐.

11. 자유민주주의 논란

교과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 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 로 바꾸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사교육과정 추진위원 20명 중 9명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퇴하면서 촉발되었는데,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정부의 뒤늦은 표현 변경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자,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 고 하여 이후 파행으로 이어짐.

12.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

‘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하여, “만약 슈퍼에서 의약품을 사서 먹은 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며 “슈퍼 주인에게 물어 슈퍼 업무를 정지시킬 것이냐” 면서 생산설비 준비·관련 교육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 슈퍼판매를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안전성 논란 외에도 종전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의약품이 슈퍼판매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이 증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두됨.

13. 4대강사업 논란

제18대 국회 4년 내내 논란이 된 것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공약인 4대

강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감 등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고, 준설토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도 제기됨.

14. 정부기관 IT보안과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이 갈수록 늘고 지능화됐지만 아직 보안 전담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중앙 행정기관이 7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보안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을 통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많이 조명됨.

15. 우면산 산사태 책임소재

지난 여름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에 대해 지난해도 토석과 나무가 배수로를 막는 율해와 똑같은 원인으로 산사태가 났는데도 충분히 복구하지 않아서 더 크게 산사태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서울시가 특정 학회에 용역을 주고 해당 조사단에서 위원구성과 활동내역 등을 모두 결정하더니 '천재'라고 결론지었다면서 조사단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진익철 서초구청장,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추궁됨.

▣ 2011년도 생활형 국감사례

01. 폭등한 전세값과 전·월세 대책 점검

2009년 4월 오르기 시작한 전세값은 2011년 8월까지 1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전세값이 폭등했다면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조명됨.

02. 부실운영위원회 과다현상 문제 지적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75개 중에서 올해 들어 1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총 36개(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총 16개의 위원회 중에서 회의 실적이 없거나 1회에 불과한 위원회를 5개나 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에서는 59개 위원회 중 31곳이 1회 이하의 회의 실적을 보였는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됨.

03. 입학사정관제 개선 주문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에서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던 것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제도로, 입학사정관의 친·인척이 해당대학에 입학했는지 등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상피제도 외에는 사후 검증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후검증의 시스템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제기됨.

04. 기상특보 정확도 매년 하락 질타

슈퍼컴 등 첨단기상장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 정확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어 기상악화로 인한 재산·인명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주문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있었음.

05. 스마트폰 전자금융 해킹 대비책 마련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서비스 도입 1년여만에 261만명을 기록하는 등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의 전자금융서비스는 기존 PC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PC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다면서 보안 강화 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있었음.

06. KTX 열차 사고 대책 주문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KTX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7개월간 400여 차례나 고장나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KTX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는 ‘기종을 바꾸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묵살하고 국내 테스트도 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됨.

07. 농협 보이스포싱 급증 대책

농협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포싱(Voice Phishing)에 가장 많이 이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농협에서 8045건의 보이스포싱이 발생했는데, 이는 동기간 발생한 전체 보이스포싱 건수(2만7956건)의 29%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대책을 주문하는 지적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됨.

08. 동두천, 마포 등 미군성폭행 사건과 한미SOFA협정 개정

경기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주한 미군의 10대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최근 미군 자녀 5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른바 ‘퍽치기’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하였는데, SOFA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한국 경찰의 제한적 수사권문제 등의 개선주문이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음.

09. 자원외교와 CNK마이닝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문제

국내 한 업체가 전세계 생산량의 두배가 넘는 매장량을 가졌다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을 얻었는데 탐사와 매장량 추정책임을 맡았던 대학교수는 개발업체 등기이사 에다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외교통상부는 업체 말만 듣고 보도자료를 내 주가 급등에 일조했다는 지적 등이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됨.

10.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법인카드가 룬싸롱, 골프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하거나 위장 가맹점 및 현금깡 의혹 한 카드로 동일장소와 시간대에 명목을 바꿔 여러번 분할 결제한 사례, 특정한 업소에 과다지출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 여성가족위원회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11. 세종시 호화청사 문제

세종시 정부청사의 평당 건축비는 730만원, 1인당 사용면적은 57.1㎡(17.3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청사의 평당 건축비 730만원은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청사의 평당 건축비 737만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2012년 준공예정인 서울시청사 평당 건축비 725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와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됨.

12. KAIST 자살사태

KAIST 학생들과 교수의 잇따른 자살 이후 혁신비상위원회의가 내놓은 각종 제도개선안 중 일부에 대해 총장이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13개 기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됨.

▣ 2011년도 아쉬웠던 국정감사 행태

01. ‘자유민주주의’ 논쟁으로 교과위 연속파행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라고 한 발언이 발단이 되어, 당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새 역사 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교과부가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자, 박 의원이 이렇게 응수하면서 논란을 빚어 연속 파행

02. 재보선과 장관 임명 등으로 국감당일 감사위원의 상임위 사보임과 피감 준비소홀

나경원 의원이 9월 19일 상임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보임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의원들이 사보임이 있어 국감보다 선거가 앞선다는 지적임

또한, 임명장 받고 2시간 된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9월 19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첫날부터 새로 임명된 장관을 상대로 지난 1년간의 부처 운영을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고, 새 장관을 보좌해서 답변해야 할 차관이 국감에 불참한 채 해외 행사 참석을 위해 공항으로 가다가 불려오는 등의 모습

03. 끼어들기 발언 등 감사위원간 감정대립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와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감사위원간의 감정대립이 있어서 격한 말이 오가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일시적이지만 정회되는 현상 등이 벌어졌는데, 국토해양위의 9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 도중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다섯 차례나 끼어들어 반론을 제기해 국감이 중단되기도 함.

04. 육군 제2작사 감사위원 대거불참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인해 9월 21일 대구시 동구 만촌동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감사위원의 2/3가 불참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됨.(모니터위원 추방 사건까지 발생함) 이날 국정감사에는 감사반장인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지역출신인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였고, 야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불참해 전체 17명 감사위원 가운데 6명만으로 감사가 이뤄졌음.

05. 피감기관과 감사위원의 감정적 언쟁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피감기관과 감사위원간의 언쟁이 있었고, 외통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막말’ 소동이 있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의 9월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경찰행정을 제대로 못하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고 정치권에 기웃댄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했고, 답변자는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 달라. 증거를

대보라. 뭘 제대로 못했냐” 고 하여,(얼굴을 붉히며) 고성으로 설전.

06. 대통령 언론특보의 “그것밖에 안되는 인간” 문자에 국감 한때 파행

대통령 언론특보가 10월 4일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한통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잠시 정회되는 소동을 겪었음.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국감 발언에서 “이동관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가 오늘 오후 1시18분에 ‘인간적으로 섭섭하다’, ‘그 정도밖에 안되는 인간인지 몰랐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공개한 것이 원인이 됨.

07. 정무위의 “해외국감” 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 부적절

국회 정무위원회 ‘해외국감’ 의 시의적절성 문제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논쟁으로 확산되어 논란이 되었고,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저축은행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금융감독원 해외 사무소와 산업은행 등의 해외 지점 등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피감기관에 대한 해외 국정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되었음.

08. 환노위 국감 수감현장서 피감기관장 수행원의 포커판과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의 막말

9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난데없는 ‘도박’ 물의가 빚어져서 기강해이 문제 발생함.

수도권매립지공사 조춘구사장은 “어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악취 때문에) 난리가 났다” 며 “내년이 총선인데 주민들 표를 먹어보겠다고 각 정치세력이 여기에 그냥 다 덤벼 들고 있다” 고 답변 했고, 특히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조춘구 사장의 막말 발언에 대한 환경노동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조춘구 사장은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하려고 발언을 했다” 며 다시 한번 국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조춘구 사장을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키는 일이 발생함.

09. 여성가족위원회의 국감 파행

경찰청장을 비롯해 다수의 증인의 불출석문제에 대해 의사진행 여야 공방이 벌어져서 감사 개회 50분 만에 중지되었고, 또한 감사일정을 연기해야하지 않겠냐는 발언도 오가서 증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들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활용도 및 국감홈페이지 활용현황

- 국정감사 기간과 그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의 ‘국회의원 보도자료’ 게시판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지를 조사해 본 결과, 2, 960건의 보도자료, 질의자료, 정책자료집 등이 게시되어 있었고, 활용의원도 60~70여명의 의원이 국정감사 중 매일매일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감사위원이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정보를 올렸으며, 한나라당 국정감사 홈페이지에는 618건의 보도자료가 올라가 있었고,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는 소속의원의 국정감사내용을 매일매일 정리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함.
- **감사위원의 개인 홈페이지 활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 제18대국회 제3차년도 국정감사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위원은 한나라당 169명, 민주당 87명, 비교섭단체 39명으로 총 295명이었으며, 이중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285명으로 전체 감사위원(국회의원)의 96%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음.
- 국정감사기간 중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관련 활동 자료(정책자료집이나 보도자료 등 의원실이 제작한 자료로 단순히 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기사는 제외하였음)를 공개한 의원은 65.96%로 지난해 58%보다 높게 나타나 의원이 의원 홈페이지 등에 국감관련 자료를 올려 놓고 있었음.
- 위원회별로 홈페이지 활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로 17명의 의원 중 6명만 국정감사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의 홈페이지 국감자료 제시율도 각 50%에 불과하였고, 28명이 소속되어 있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28명의 의원중 15명이 국정감사자료를 의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국정감사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위원회가 되었음.
- 파행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21명 중 21명의 의원의 홈페이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2010년도와 같이 16명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자료를 올려 놓아 76%의 국감자료 등재율을 보였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9명의 의원 중 17명의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장 높은 89. 47%로 지난해 63.15%보다 26.32%나 증가하였음.

〈국회(18-4)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 홈페이지 활용도조사〉

위원회	감사 위원수	국감자료 등재 위원	등재율 (%)	2010년	전년대비
법제사법위원회	16	8	50.00%	43.75%	+6.25%
정무위원회	22	13	59.09%	33.30%	+25.79%
기획재정위원회	26	23	88.46%	61.53%	+26.93%
외교통상위원회	28	15	53.29%	32.14%	+21.15%

국방위원회	17	6	35.29%	35.29%	0.00%
행정안전위원회	24	18	75.00%	37.50%	+37.5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1	16	76.19%	38.09%	+38.1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8	17	60.71%	42.85%	+17.86%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9	17	89.47%	63.15%	+26.32%
지식경제위원회	25	16	64.00%	50.00%	+14.00%
보건복지위원회	24	12	50.00%	54.16%	-4.16%
환경노동위원회	14	11	78.57%	53.30%	+25.27%
국토해양위원회	31	24	77.42%	67.74%	+9.68%
평균			65.96%	47.14%	+18.82%

2011년도 상임위 국감총평

**10·26 재·보궐 선거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국감참여도 미흡
국정감사 워스트는 2010년도에 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번 2011년도 국정감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한미FTA 문제, 국가재정건전성과 조세문제 등 중량감있는 이슈가 많았으나 결국 ‘도가니’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영화 ‘도가니’ 관련 국정감사 내용이 크게 주목을 받았고, 국감 후반으로 갈수록 주목도는 크게 떨어졌음.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2011 서울고검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금품의혹 제기하여 이슈가 되었고, 2007년 대선당시 BBK 사건에 대한 언급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장 재판관의 해외출장 시 가족동반 문제, 피의자구속과 석방철차의 제도적 개선 요구, 현재의 남소방지 공탁금제도 도입 검토, 아동·청소년 성폭행 급증,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및 영화 “도가니”의 소재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관대한 양형에 대해 추궁하였음.
-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는 3개반으로 나누어서 첫 해외국정감사를 실시하였고, 한국거래소의 낙하산 인사, 여신금융협회 연구소 과대 인건비 책정 등 행정부처의 인사처리 및 행정업무의 있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한 사건들을 제기 하였고, 더불어 서민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전세값 상승,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절, 이동통신사의 통신과소비 조장 등의 질의가 이어짐.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에서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의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역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및 경영평가 자료의 상습적 조작에 대한 문제점 제기, 관계부처(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전관예우 심각성, 국세청의 업무 실수로 인한 세금부과, 가짜의약품의 유통 증가, 물가관리 문제 등이 조명됨.
-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남경필)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문제가 2011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였으며, 감사위원간의 막말 논란이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FTA 번역에 대한 오류 문제, 해외 개발업체 특혜지원 의혹, 친북세력 재외국민투표 제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비춰졌음.
-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에서는 출석률과 참여율이 다른 위원회 보다 낮은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특히 육군 제2작전사 국정감사에 여야위원 할 것 없이 대거 불참해 국정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하였고, 이외에도 연예사병의 휴가 특혜, 군 간부 및 병사의 가혹행위 증가 실태와 비리적발 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였으며, 국방부·합참 신축건물의 북한공격(EMP)의 취약점 제기 및 시공경험 없는 특정 기업에게 수주, 해군 전력함인 KDX II 운용실태, 군 건축물의 30% 석면 검출 등이 문제제기 됨.
-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인기)에서는 2개반으로 구성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을 많이 진행하였으며, 지자체 국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가운데, 경찰청장의 정치권 개입과 관련해 야당위원과 경찰청장과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고, 지방경찰청장 및 서장의 호화집무실, 강정마을 용역폭력, 전·의경 급식비 책정(1940원)의 문제점, 미군 성폭행범에 대한 불구속 처리에 대한 책임 추궁, 청와대가가 직접 관여해 야당위원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뒤진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며, 집회시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교과서 논쟁으로 파행을 이어갔으며, 타 위원회에서 제기된 전관예우 및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 및 대학 구조조정 및 고무줄 예산편성으로 인한 등록금 폭탄, 특정 사학에 국가보조금 지원, 고3학생부 부당수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인 인화학교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 및 대책을 주문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에서는 는 임명 된지 2시간 된 장관을 상대로 한 첫날 국정감사의 실패를 10월 5일 다시 수감하는 등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올해 12월부로 개국되는 종편 방송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루었고, KBS의 도청의혹에 대한 불쾌함을 표하기도 하였으며, 이외에도 중국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문화유산, 동일본 대지진 취재진 방사능 피폭문제, 업로드 상한제도 도입 등이 제시되었음.

- 농림수산물위원회(위원장 최인기)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위원들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구제역 처리에 대한 후속 문제인 침출수 유출, 농협의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 유기농 농산물 부실 관리, 농촌 체험마을의 부실 운영, 공기업의 특정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문제제기 되었으며, 대부분 두 개의 지자체 국감을 제외하고 국정감사를 국회 내에서 실시하여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를 통해 국정감사를 볼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에서는 9월 15일 있었던 전력대란으로 인한 정전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 및 공기업간의 의사소통 부재 특히 전력공급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정전 당일 행보, 대기업 전기 값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업확장, 정부의 기름 값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음.
-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에서는 소속 야당위원이 나경원 위원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복지위원의 소속변경을 놓고 문제가 제기되었고, 동네병원의 약물남용 문제, 감기약 슈퍼판매 논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실효성 논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가격협상 유착관계, 영리병원의 도입 허용여부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음
- 환경노동위원회(김성순)에서는 피감기관인 수도권매립지공사 소속 수행직원들의 도박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고, 수도권매립지 공사 사장의 국회모독발언으로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 가운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석면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파괴, 습지훼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특정 업체와 담합 및 국내사업장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타협안이 제시되었음.
-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장광근)에서는 여야위원들이 우면산 산사태의 책임 추궁을 놓고 대립각을 이루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간 고성이가 오가기도 하였으며, 더불어 서울시 보금자리 주택 당첨자의 부적격 문제, LH공사 건설원가 부풀리기, 공사 직원과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편취 등의 문제를 제기 하였고,

KTX의 잦은 고장 및 해안경비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음.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우여)에서는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실명 제법위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투기논란이 야당위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여야 한 목소리로 대통령 측근 비리(사촌 형 4대강사업 사기혐의,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 금품수수혐의,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 저축은행 비리의혹)에 대한 점검이 있었음.
-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최영희)에서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수 증인의 불출석으로 감사시작 50분 만에 중지되었고 오후3시에나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특히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청소년 성범죄의 증가, 북한 이주여성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논의 되었음.

■ 모니터위원들이 본 호감형 의원과 비호감형 의원

[호감형 의원]

- ▶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원
- ▶ 피감기관장보다 피감기관의 행적에 대해 잘 아는 의원
- ▶ 감사시간동안 끝까지 감사장을 지키는 의원 -> 이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에 남아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
- ▶ 피감기관 및 다른 의원의 말을 경청하는 의원
- ▶ 국감준비에 성실히 하여 다양한 질의를 하는 의원 -> 직접 보좌관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을 토대로 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
- ▶ 발언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의원 ->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이 준비한 질의 및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비호감형 의원]

- ▶ 자신의 질의만 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의원
- ▶ 주어진 발언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의원
- ▶ 타 의원의 질의에 끼어드는 의원 -> 자신의 발언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씩 끼어들어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음.
- ▶ 기관장에게 소리부터 지르고 맹목적인 비난을 하는 의원(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 ▶ 국감자료나 질의가 불성실한 의원
- ▶ 질의인지 낭독인지 구분이 안가는 의원-> 보좌진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읽고 형식적으로 감사에 임함
- ▶ 반말, 취조하듯이 질의하는 의원-> 언론에서도 비취졌듯이 막말 및 비하하는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킴
- ▶ 동일한 질의로 시간을 낭비하는 의원 -> 보통 이석이 많은 의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 피감기관장의 답변을 딱 잘라 자신의 질의만 하는 의원

붙임 #1

제18대 국회 네번째 정기회(2011년) 국정감사 개황

2011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으로 함)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9월 1일 제303회 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11년도 국정감사시기변경의 건(의안번호 13086호)'를 의결하여 2011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일간 실시하였음.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여성위원회는 10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10일과 10월 17일까지 2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음.

2011년도 국정감사의 특징 중 하나로 국정감사 직전에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주민 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여파로 서울시장 사퇴와 서울시장을 뽑는 10월 26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많이 벗어난 가운데, 한미FTA, 4대강사업으로 인해 여·야간의 정쟁이 국정감사장 안에서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평온하게 진행되었음.

감사위원회는 국정감사전인 8월 4일에 의원직을 사직한 김효재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을 제외한 295명의 국회의원이 감사에 참여, 지난해 297명보다 2명이 줄었으며, 다만, 성추행 파문으로 1개월 정지결정을 받은 강용석 의원, 수감중이다 보석결정을 받은 강성종 의원이 국정감사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감사위원이면서 국무위원으로 국감직전인 9월 17일 임명된 김금래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식품위원)이 감사를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의원직을 승계한 이영애 의원(10월 4일 승계,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위 보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보건복지위원, 10월 6일 의원직 사퇴)과 예비후보로 야권통합선거에 참여한 박영선 의원(법제사법위원) 등이 감사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였음. 다만 지난해 국무위원으로 활동해 온 유정복 장관(농림식품부, 행정안전위원), 진수희 장관(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최경환 장관(지식경제부, 기획재정위원), 이재오 장관(특임장관, 보건복지위원, 9월 20일 장관면직)등과, 정병국 장관(문화체육관광부, 환경노동위원)이 국감 직전(9월 17일)에 면직되어 감사위원으로 적극 활동하였기 때문에 지난 2010년도에 실제로 감사활동을 한 의원은 최다선인 법제사법위원회 조순형 의원(7선)을 비롯하여 291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471개 기관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승인한 92개 기관을 합쳐 지난 2010년도의 516개 기관보다 많은 563개 기관이었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010년도 84개 대상기관에 이어 올해에도 85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가장 많은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실제 국정감사 일수는 감사기간 중 감사일수는 지난해 164일보다 적은 156일(계획 157일)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감사시간은 1234시간 25분(2010년도 1,331시간 49분, 2009

년도 1341시간 11분, 2008년 1,386시간 52분, 2007년 1,224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100시간 정도 줄었음. (국회공보 기준, 정보위 제외)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2011년도 94.54%로 2010년도 94.93%와 비슷하였으며 93%를 약간 상회하였던 2009년도 국정감사보다 조금 높아졌고,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7년도의 90.57%보다 높아졌음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지난해와 같은 심수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으며,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진 64회(2010년도 56회, 2009년도 64회, 2008년도 55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으며,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에는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86일분을 영상회의록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감사기간 중 파행을 가장 많이 겪은 상임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논란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감영상 무단삭제’논란 등 여·야간의 갈등이 심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이었으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거의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되었음.

이번 국정감사 중 이슈로 부상한 것은 초유의 정전사태와 한미 FTA 비준안 논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정책 공방, 영화 ‘도가니’ 상영이후의 ‘도가니’ 판결 논란, 저축은행 사태, 등록금논란, 4대강사업의 효과성 논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년 넘게 끌어온 미디어법 공방 등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산하 공기업 모럴 해저드의 실상과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음.

〈상임위원회별 위원의 국정감사 출석률〉

위원회	위원출석률(%)	위원회	위원출석률(%)
법제사법위원회	90.6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92.98
정무위원회	95.22	지식경제위원회	99.11
기획재정위원회	91.26	보건복지위원회	93.52
외교통상위원회	98.21	환경노동위원회	94.16
국방위원회	89.54	국토해양위원회	100
행정안전위원회	91.03	운영위원회	95.8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99.35	여성가족위원회	93.7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93.51	평균	94.54

※해외 국정감사 및 현장시찰 제외

붙임 #2

국감 전·중간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의 장 변동 현황일람

1. 국정감사기간 중 감사위원 사·보임

위원회	교섭단체	사임위원	보임위원	사보임 연월일
국회운영	한나라당	한기호	황영철	11. 09. 19
문화체육관광방 송통신	한나라당	나경원	진수희	11. 09. 19
농림수산식품	한나라당	진수희	김금래	11. 09. 19
보건복지	한나라당	김금래	나경원	11. 09. 19
여성가족	한나라당	김금래	최경희	11. 09. 19

2. 국정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 퇴임

위원회	정당	퇴직의원	사유	퇴직 연월일
보건복지	한나라당	나경원	재보궐선거	11. 10. 06
농림수산식품	한나라당	김금래	퇴직(탈당)	11. 09. 29

3.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직 승계

위원회	정당	승계의원	사유	의원직승계 연월일
농림수산식품	한나라당	이영애	의원직승계	11. 10. 4 (10. 5 보임)

4. 국정감사 기간 중 위원회 간사 개선

위원회	교섭단체	사임	선임	개선 연월일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성영	박준선	11. 09. 19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11. 09. 19

5. 국감중 국감지적 피감기관의 장 변동

위원회	직위	면직	임명	임명 연월일
국회운영위원회	특임장관	이재오	-	2011. 9. 20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이용훈	양승태	2011. 9. 21 (가결, 제5차국회본회의)
외교통상통일위	통일부장관	현인택	류우익	2011. 9.17
문화체육관광방 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최광식	2011. 9. 17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임채민	2011. 9.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김금래	2011. 9.17

붙 임 #3

국감 중 증인·참고인 신청·채택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례(신청 이유)

- 1) 최재원 SK부회장 (에스케이 비자금 의혹)
- 2)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부실사학 재정지원)
- 3)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학습지교사-특수고용노동자-노동자 인정여부)
- 4) HR장풍 대표 (한진중공업 용역폭력)
- 5) 한예슬 영화배우 겸 탤런트 (드라마 제작 여건)
- 6) 김영무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적절한 로비 의혹)
- 7)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

- « 2010년 국감중 증인신청·채택 논란이 된 대표적인 증인(증인신청 이유) »
- 1)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우리은행 관련)
 - 2) 국무총리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국무총리실 불법사찰과 관련)
 - 3) 유명한,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외교부 특채파문)
 - 4)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금융실명제법 위반, 신한사태 관련)
 - 5)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청와대 MBC인사 개입 의혹 관련)
 - 6)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비자금 조성의혹 관련)
 - 7)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SSM법안 통과 반대 로비 의혹)
 - 8) 이백순 신한은행장 (신한사태 의혹)

언론에 조명된 불출석 사례 및 사유

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참고인	불출석 사유
법제사법위원회	10월 6일-법무부 노환균(법무연수원장)	2011 코이카(KOICA) 외국 법조인 초청 연수 행사' 참석
정무위원회	10월 6일 - 국무총리실 이영수(KMDC 회장)	
외교통상위원회	10월 5일 - 외교통상부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
행정안전위원회	9월 22일-경찰청 서00.이00 ('장풍HR' 공동대표)	건강상 이유, 지방출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9월 19일-교과부 김창경(교과부제2차관) 홍승용(대학구조개혁위원장) 이용근(서일대 전 이사장)	제55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19~23일)에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참석, 가족회의, 병원입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9월 19일-문화체육관광부 한예슬 (연예인)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환경노동위원회	9월 20일-고용노동부 박성훈(재능교육회장)	해외출장
국토해양위원회	9월 19일-국토해양부 김영무(김&장 대표)	해외출장
여성가족위원회	10월18일-여성가족부 조현오 청장, 현대글로벌비스 사장	

붙임 #4

2011년도 국정감사(18-4) 주요 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 용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일수	특이 (특색)
법제사법 (우윤근)	16	55	11	85시간 57분	1	3	울산구치소 시찰
정 무 (허태열)	22	63	12	119시간 1분	4	10	첫 해외 현지감사
기획재정 (김성조)	26	25	11	96시간 39분	5	7	-
외교통상 통 (남경필)	28	28	12	75시간 17분	4	4	해외국감 막말소통
국 방 (원유철)	17	56	11	64시간 05분	3	3	제주해군 기지시찰
행정안전 (이인기)	24	25	13	90시간 36분	3	11	전의경대 시찰
교 육 과학기술 (변재일)	21	85	12	95시간 03분	3	7	4년 연속 연속파행
문화체육 관광방송 통신 (전재희)	28	51	13	129시간 13분	8	9	평창통계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농 립 수산식품 (최인기)	19	15	12	88시간 05분	10	11	경기도 강원도 지방국감
지식경제 (김영환)	25	61	11	88시간 53분	5	5	정전사태 질타
보건복지 (이재선)	24	16	11	85시간 05분	5	5	제약사 시찰
환경노동 (김성순)	14	47	11	95시간 10분	6	6	한진중공업 사태타결
국토해양 (장광근)	31	21	11	106시간 06분	4	5	4대강사업 막말소통
계	295명	548개 기관	151일	1,234시간 25분(국회공보기준)	61일	86일	-
2010년도 국정감사	297명	481개기 관	158일	1303시간 49분	53일	14일 (국회방송생중 계일수)	시찰일수 14일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296명중 국회의장 박희태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10월 6일 감사위원 사퇴 1명과 감사위원 변동(김금래의원→이영애의원)이 있었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국방위원회의 경우 1일차와 2일차 국감산회시간이 24:00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8시가 조금 넘어서 산회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며, 감사시간 총시간은 겸임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시간임.
 3. 화상모니터링 가능일수는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서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 겸임 상임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 용일수	화상모니터 링가능일수	특이 (특색)
국회운영 (황우여)	24	7	2	15시간15분	2	2	-
여성가족 (최영희)	16	4	1	12시간 16분	1	1	증인출석문제로 오후에 시작

※ 이상의 모든 수치는 비공개로 이루어진 국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것임.

붙임 #5

2011년도 국정감사 파행(일시적 정회포함) 일지

일자	상임위	피감기관	파행이유	경과
9월 19일	문방위	문화체육관광부	취임 이틀째인 최광식 장관을 상대로 국정 감사를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장관을 보좌해야 할 박선규 2차관 마저 중국 출장으로 국감에 불출석	전재희 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와 박 차관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전 국감 시작 50분 만에 정회를 선언. 오후 2시30분쯤 속개된 뒤에도 뒤늦게 불려온 박 차관을 질타하느라 국감 질의는 1시간 이상 늦어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 장관에게 업무를 파악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10월 5일 추가로 문화부 국감 실시
9월 19일	외교통상위	외교통상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위키리크스에 언급된 외교부 안모 국장을 겨냥해 “매국노다. 한국은 미국 쇠고기 수입하고 싶으니 대만에 압력을 넣어달라니, 망신” 이라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국무위원에게 매국노라는 단어를 썼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언급된 외교부 안모 국장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난하자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등이 이에 맞서 즉각 반발해 여야 간 고성이가 오는 소동이 빚어지면서 국감이 정회되는 등 파행
9월 19일	지식경제위	지식경제부	‘정전사태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책임지라’며 화를 내어 국정감사가 정회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회의를 다시 열면서 김영환 위원장은 최 장관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했고, 최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종결
9월 22일	국토해양위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야당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촉발 준공을 눈앞에 둔 4대강 사업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인한 여야 간 감정싸움과 이에 대한 위원장 가세	낮 12시 10분께 정회를 선언. 오후 2시10분께 다시 속개. 오후 3시20분께 다시 정회를 선언, 오후 4시 쯤 속개.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유관 12개 기관	19일 교과부 본부감사 당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의원 하라”고 한 발언이 발단. 야당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매카시 논쟁이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보고 사임하라고,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며 “(박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	오전 10시 시작부터 설전 후 시작 한 시간 여 만에 정회. 오후 2시 진행된 속개 논의는 야당 측 반발로 무산

일자	상임위	피감기관	파행이유	경과
9월 23일	교육과학위	서울시교육청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불거진 역사 교과서의 ‘자유 민주주의’ 용어 등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변재일 위원장을 정회선언을 함.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입장 거부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지 못함.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이 오지 않을 경우 국감 강행 의사를 밝히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개회가 선언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논쟁이 지속. 변재일 위원장은 낮 12시43분께 정회를 선언했고 이날 오후 5시까지도 속개되지 않음.
9월 26일	교육과학위	인천시교육청	박영아 의원 관련 영상기록물 파기를 둘러싼 교과부 간부의 증인출석 요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	개정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1시간 30분이 지난 11시 30분에야 야당 의원들 출석. 오후 5시40분 정회
9월 27일	교육과학위	대전·충남·북 교육청/충북대와 충남대, 강원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 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는 발언을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한 끝에 사실상 국감을 포기	3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서면질 의와 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서면질의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마무리
10월 4일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오후질의 도중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	국감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확인 작업을 하기로 하고 감사진행
10월 4일	교육과학위	대전 원자력기술연구원	19일에 있던 박영아 의원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 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하라”는 발언	오전 10시 시작키로 되어 있었지만, 2시간 지연되어 11시 50분께 시작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KBS (한국방송공사)	6월 발생한 '국회 민주당 대표실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한 여야간 공방	여야 의원들의 논박이 계속되자 전재희 위원장은 회의를 10분간 정회 후 10분 후인 오전 10시 45분 쯤 회의가 속개
10월 7일	교육과학위	교육과학기술부	박영아 의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기록물을 교과부가 파기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설전	오전 11시 38분 감사를 중단, 오후에 감사시작 하여 자정을 넘
10월 18일	국회정보위	국가정보원	기무사 군무원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모 교수 사찰 관련 증인 채택 문제	오전 10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약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40분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렸다.
10월 18일	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조현오 경찰청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충돌	오전에 한 시간 동안 갈등 이어지다 정회, 오후 2시에 국정감사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를 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국정감사가 속개.

붙임 # 6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개선방안

①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업무보고시 정례화하자.

위원회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되는 질의를 예방하도록 해야 함.

이번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사내용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을 책자화하여 배포하여 화제가 됨

② 자료제출 및 요구를 법제화하자

자료 제출이나 요구에 있어서 피감기관과 감사위원간의 갈등이 매년 빚어지는데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자료제출 의무사항을 법제화 하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내용으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③ 외교통상통일위의 해외국감은 예산낭비 말고 화상국감으로 하자.

대부분 중진으로 구성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해외국감은 격년제로 화상국감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2011년도 국정감사의 특색중 국회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외부 국정감사내용을 화상으로 올려 놓은 것인데, 제19대 국회부터는 모든 국감내용은 영상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심있는 국민이나 필요한 기관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제17대보다 개선되었지만, 문서국감 속기록을 신속히 올려놓는 것도 필수적임)

< 근본 개혁 사항 8가지 >

- ① 감사원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헌법 개정논의시 반영)
- ② 국회 전문인력 및 전문 보좌진 충원 (지속 추진·보완)
- ③ 국정감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증인선정제도의 개선)
- ④ 국회모욕, 국정감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 ⑤ 국정감사 무용론 등 경계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피감기관 및 정부측의 반발성 국감폐지론 경계)
- ⑥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 검토
- ⑦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녹화중계 등은 물론 국가기간방송(KBS) 등을 통한 TV생중계의 확대
- ⑧ 국정감사의 집중도 강화
(되도록 1일 1피감기관 원칙 또는 소위원회 활성화로 국정감사의 집중도 강화)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